

산업부·코트라, ‘수출스타 500 사업’ 본격 추진

매년 중소·중견기업 100개 선정
최대 8억 지원… 수출 중추기업 육성
내달 11일까지 사업참가 신청 접수

정부가 향후 5년간 ‘수출스타’ 기업 500곳을 집중 육성한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연간 수출 1000만달러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스타 500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연간 최대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출 1000만~5000만달러 수준의 수출 중추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꺼내든 이유는 수출 중추기업이 감소세에 있기 때문이다. 수출 1000만~5000만달러 기업 수는 2021년 2749개에서 지난해 2586개로 줄었다. 수출 대기업과 소수 강소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완화하지 않으면 ‘수출 1조달러 시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모빌리티, 기계·부품, 항공·조선 등 주력 산업과 AI·디지털, 반도체·차전지 등 첨단 산업, 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강경성 코트라 사장,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이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트라

-뷰티·식품·유통·패션·바이오·의료 등 소비재 분야 9개 업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코트라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와 함께 매년 6~8억원 사업비의 50~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은 국고 보조율 70%, 중견기업은 50%가 적용된다. 기업 부담분의 절반까지는 해외 마케팅 인건비, 전시회 비용 등 실비 투입으로 인정해 부담을 낮췄다.

또 코트라를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으로부터 기업별 전담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총 15명의 전담 멘토가 해외 마케팅, 무역보험·수출보증, 수출목적형 R&D, 해외 인증 취득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코트라는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무보는 무역보험과 수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해외인증 취득 서비스 등을 각

각 제공한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이들 5개 수출지원기관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수출 5강,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수출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올해 수출기업 10만개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참가 신청은 오는 2월 11일까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청년인턴 채용

121명 선발… ‘정책제안서’ 심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21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인턴 선발을 통해 농업행정 분야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장려한다.

응시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34세 국민이다. 열린 채용 원칙에 따라 어학성적 등 정량적 우대요건(이른바 ‘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채용공고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농식품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일평균 약 3만6000명의 귀성객 및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통한 해양 사고 예방에 나선다. 위해요소 식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3~18일) 전까지 조치해 연휴기간 안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기후부, 녹색정책금융 이차 보전규모 확대

전년비 신규대출 지원 2배 확대 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 뒷받침

올해 녹색정책금융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이차(利差)보전 규모가 작년 대비 2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조5500억 원과 비교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이자 부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

제활동·국제감축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 받을 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할 때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이차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

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회사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급망 내 감축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와 함께 운영된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올해 1월 말부터 참여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진청, AI 리더십 교육

‘AI 시대 결정을 이끄는 리더’ 주제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 시대 결정을 이끄는 리더’란 주제로 AI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 18일 밝혔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19일 실시되는 이 교육에는 청장을 비롯해 본청 및 소속기관 고위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공공부문 전반에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책 기획·조정과 조직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의 AI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AI 혁신을 이끌 고위공무원의 결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농진청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고위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업무 품질과 속도를 함께 높이는 도구로 이해하고, 부서 단위 실행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1.5조 적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3년여 만에 적립금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의 적립금은 1조 5406억원으로 출범 이후 매년 70~80% 이상 성장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현재 전국 3만6432개 사업장의 근로자 16만6357명이 가입했다. 2024년 말 대비 사업장은 56.8%, 근로자는 53.3% 늘었다.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공동 관리해 안정성을 높인 점이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채권 등 안전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보수적 운용기조 속에서도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연도별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광해광업공단

광산 안전관리 134억 투입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올해 국내 광산 안전 확보를 위해 134억원을 투입한다. KOMIR은 산업통상부 승인을 받아 국고보조사업 예산 134억원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노후 광산의 안전관리시설과 장비 확충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긴급대피시설 구축과 낙후된 작업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나선다. 또 개별광산 안전진단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광산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가행(운영) 중인 광산 가운데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석탄·일반광산이다. 갱내통신, 긴급대피시설, 낙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80%를 국고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남부발전, 재생에너지 전환 박차

축분 고체연료 산업 본격 육성

한국남부발전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발전 로드맵을 내놓으며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남부발전은 지난 16일 경남 하동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및 전소 발전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축분 고체연료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하동 발전 7·8호기를 ‘축분 연료 혼소발전 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16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함께 하동 7·8호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남부발전

비’로 선정했다. 해당 설비는 2026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저장조·분쇄기·이송설비 등 전 공정을 밀폐형 시스템으로 구축해 비산먼지와 악취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섞어 태우는 혼소발전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동을 비롯해 삼척 등 주요 권역별로 축분 전소 발전소 운영도 검토한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전국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기반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 농가에는 분뇨 처리의 고민을 덜어주고, 발전사에는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최고의 상생 모델”이라며 “농식품부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